

韓日 정상회담 무산에도 '관계 복원' 위한 대화 이어간다

文, 실무적 협상 강력한 의지 표현
한일 대화 복원 노력 이어나갈 듯
최종건 외교차관, 오늘 한미일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문제를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부분 또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표현하셨다. (이어) '실무적 협상은 계속해나가자'(라며 문 대통령) 강력하게 의지를 담긴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양국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성과가 진척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오른쪽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뉴시스

해서 외무장관 회담 등 이런 것들이 이어가면 아마 좋은 양국 간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한·일 관계 복원 의지에 대해 표명한 바 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2001년, 일본 도

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양국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공조 복원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올해도 쿄올림픽 이후에도 한·일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도쿄에서 모리 타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다. 이어 21일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한·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기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전염병 대응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 관련 협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보다 다른 필요나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8월 중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무산된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건 차관도 20일 오전 도쿄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정서와 직결된 역사적 문제는 우리의 본질적 문제이니 반드시 봐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일 회담 관련 실무협상 진행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文 "비판 겸허히 수용... 장병들 안전, 곧 국가 안보"

청해부대 34진 장병 집단감염

"안이한 대처 사과... 회복에 최선"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원 귀국하는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의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애가 타는 부모님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원 귀국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군수송기를 보내 전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후송을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한국시간) 현지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국방부는 의무요원, 함정 방역 및 인수요원들은 먼저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이같이 사과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군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EU(유럽연합)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정부에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황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 4년

을 맞이한 데 대해 "우리 경제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희망 회복자금을 통해 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기대한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보수 텃밭' 대구 찾은 윤석열, 민심 공략

동신의료원·서문시장 등 방문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에 방문, TK(대구·경북) 민심에 호소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 전 총장은 이날 4·19 혁명의 씨앗이 된 2·28 민주운동 기념탑,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문시장,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치료 거점이 됐던 동신의료원 등을 찾으며 시민과 만났다.

첫 일정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내 위치한 2·28 민주 의거 기념탑이었다. 이 장소는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자유

당 정권이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대구 내 8개 공립학교에 일요일 등교령을 내린 데 대해 고등학생들이 저항하며 가두행진을 벌인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참배한 뒤 2·28 민주운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 전 총장이 기념탑을 찾았을 때는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방문해 깃발과 현수막, 스마트폰을 들고 '윤석열' 이름을 연호했다. 윤 전 총장이 현장에 도착하자 악수하려는 지지자들과 경호원, 취재진이 뒤엉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2·28 민주운동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대구 경제 살리기 간담회를 위해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을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구·경북지역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중요시하고 나라 미래를 더 먼저 생

각하는 그런 리버럴(자유로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대구·경북 보수 표심을 의식한 방문이라는 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음 일정으로 대구 중구 소재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곳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방문할 때 거의 매년 방문하는 곳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주 방문했다. 대구 중심부에 자리 잡은 TK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린다. 이에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서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곳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묻자 "어떤 진영에 입각한 생각을 갖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전 화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고충과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왔다"고 답했다. /대구=박태홍 기자 pth7285@